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전 용 식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연구위원
yongsik.jeon@kiri.or.kr

1.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가계신용이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대출금인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거래인 판매신용의 합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15년 1분기 기준 1,099.3조 원이며 이 중 가계 대출은 1,040.4조 원, 판매신용은 58.9조 원이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로 구분되는데,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75.3조 원, 기타대출이 152.1조 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이 94.6조 원, 기타대출이 133.1조 원으로 나타난다. 보험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285.2조 원으로 분석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6년 11.8%를 기록한 이후 2007년 9.6%, 2009년 7.3%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과 2011년 소폭 상승하였다. 이듬해 5.2%로 하락하는 듯 했으나 2014년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미국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前 한국금융연구원, 삼성금융연구소, 우리금융지주,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 現 보험연구원
-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2015),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2014), 자동차 보험회사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2013) 등

들어 6.6%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명목경제성장률은 2007년 8.0%, 2010년 9.9%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2년 3.4%를 기록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3% 대에 머물러있다. 가계부채 증가율과 명목경제성장률은 2007년 이래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거나, 2012년 이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가계신용 현황

[단위: 조 원]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 금융 기관	판매 신용	합계
	주택담보 대출	기타 대출	주택담보 대출	기타 대출			
2007	245.8	117.9	47.1	63.4	156.0	35.3	665.4
2008	254.7	133.8	56.4	70.3	168.3	39.9	723.5
2009	273.7	135.8	64.8	75.5	184.5	41.7	776.0
2010	289.6	141.8	73.2	88.9	200.2	49.4	843.2
2011	308.9	147.0	83.1	100.6	221.8	54.8	916.2
2012	318.2	149.0	86.0	106.6	246.1	57.9	963.8
2013	328.9	152.2	89.2	116.9	275.8	58.5	1,021.4
2014	365.6	154.1	95.0	131.2	281.7	60.2	1,087.7
2015 1분기	375.3	152.2	94.6	133.1	285.2	59.0	1,099.3

자료 한국은행

2.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문제점

가계부채는 부동산 경기와 실물 경제, 그리고 금리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는 주거 혹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

며,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매입한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투자 수익이 실현되고 이를 새로운 주택담보대출과 결합하여 또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행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창업이나 운영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 그리고 생활 자금이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 저신용 계층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특히 신용 카드회사의 카드대출,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간주된다.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성장과 병행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 부채는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부채 증가세도 함께 둔화된다. 경기가 호황인 경우 가계와 기업은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부채를 늘리지만, 경기가 부진할 경우 투자 감축, 소비 감소 등을 통해 부채 수준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감은 대체로 경기 변동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가계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 가계부채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택 구입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난 후 경기 부진,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은 취약해지고 이는 대출이자 연체, 강제적인 주택 매도 상황으로 이어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사업 관련 자금을 차입한 자영업자는 경기 부진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진다. 가계와 자영업자의 소득과 신용도가 심각히 악화되면 이들이 금융 소외자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게 된다. 금융 소외자의 경우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높고 이를 통한 고금리 대출은 이미 심화된 가계부채 문제를 질적으로 더욱 악화시킨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 국내의 금융 소외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6년 이후에는 전세 가격 상승이 전세 자금 대출과 주택 매매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 가계부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준 금리를 포함한 국내 금리가 추세적으로 낮아진 점도 가계대출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현상은 가계부채 증가가 주는 불안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경기 회복 부진과 저신용자들의 상환능력 위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건전성이 악화된 금융회사는 시중에 자금을 공급할 때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민들의 금융 소외를 확대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 가

계부채의 경제적 부담이 저소득층에서부터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어 서민 생활을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게 한다. 나아가 경제적 약자의 증가로 사회 안전망이 훼손되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는 국가채무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

3. 서민금융과 사회적기업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실업자를 줄이고 고용을 창출해내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확대하였다.

한편 정부는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지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소금융재단과 각 금융 기관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등의 소액 금융(Microfinance)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출 규모면에서 시중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등이 미소금융재단의 소액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미소금융재단의 소액금융 대출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미소금융재단의 대출이 사회적기업의 창업 자금이나 사업운영 자금 등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국내 주요 소액금융기관 현황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합계
기간	2008.7 ~2014.12	2010.7 ~2014.12	2010.11 ~2014.12	2008.12 ~2014.12	
시행 기관	미소금융 재단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 저축은행	시중은행	국민행복 기금	
대출 금액	1,3조 원	6,4조 원	10,1조 원	2,3조 원	20,2조 원
최대 대출 금액	창업자금 5,000만 원, 사업운영자금 1,0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최대 2,000만 원	최대 3,000만 원	
금리	연 4.5%	최대 8.07% / 9.63%	평균 11~14%	은행 대출이자 연 5.5%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2.5%~6.5%	

미소금융재단의 소액자금 대출 운용 목적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곤란하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이 확보되지 않아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으로 정의되며, 사회 서비스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①

최근 발표된 국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들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이 갖는 한계를 여러 각도에서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시행된 이후 국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김재인·정건섭(2010)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②한다. 신국현·서순탁(2014)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정부 주도적’이고 ‘양적성장’을 추구하며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라준영(2010)의 연구는 국내 사회적기업이 사업전략 부재, 취약한 수익 구조, 높은 정부 보조금 의존 등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위 연구들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아직 충분한 자생력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국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두고 밀착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수익창출과 자금조달 방안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저영리유한책임회사(Low 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2008년에 도입되었고 2005년 영국에서는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라는 기업형태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적 밀착 지원의 성공적 예는 전북은행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전북은행은 도내 거주 학생, 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브크레딧론’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여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 말까지 17,826명에게 889억 원을 대출하였고, 2009년 2월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연체율은 2.69%에 불과하다. 전북은행의 ‘서브크레딧론’은 지역 서민의 금융 애로를 은행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직원들의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 전략이 결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① 민간 소액금융기관인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등은 사회적기업, 음식점, 서비스업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1,930건, 약 374억 원을 사회적기업의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 자금으로 지원하였다.

② 2009년 부산대 광선화 교수팀에서 발표한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회적기업 중 71.9%가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이 목적이다.

4. 결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은 가계가 부채상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가계가 안정된 소득 흐름을 바탕으로 부채상환 의지를 가지고 부채를 줄여나가거나 경기가 회복되어 소득 증가 속도가 부채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 가계의 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저성장 의 현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의 부채 상환 여력 위축은 가계 소비 감소를 통해 내수에 악영향을 주며 현재 소비뿐만 아니라 미래 소비에까지 영향을 준다. 사회적 측면에서 부채 상환 여력 위축은 실업, 취약계층 및 금융소외 계층 확대, 사회 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지며 국가의 복지 부담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까지 전이시킨다.

IMF 외환위기와 뒤 이은 신용카드 사태 이후 국내에 사회적기업, 서민금융 제도가 도입되었다. 앞서 언급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책이 재검토되고, 지역 사회와 밀착된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서민금융제도가 적절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서민금융이 국내 가계부채 문제 극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서민 경제의 자생력을 높여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위기를 극복할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